

글로벌 전략

글로벌전략 담당 김효진, Ph.D.
kim.hyo-jin@shinyoung.com

AI의 냉전 플레이북

분석의 기본가정

- 냉전의 재연 : 앤트로픽 에세이가 촉발한 'AI 속도 조절' 담론의 실체는 핵개발을 둘러싼 1940년대 이후 미-소의 냉전 플레이북을 그대로 재현 중
- 핵개발 과정과 마찬가지로 미-중, 미국 기업간 AI 경쟁은 속도조절보다 전력투구가 이어질 것. 다만 높아진 금리 등 감안시 종목 압축 전략이 필요

속도 조절론의 두 얼굴

앤트로픽 CEO 아모데이의 'AI 속도 조절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시장은 이를 AI 속도 조절론으로 읽었지만 에세이의 절반은 칩, 장비, 데이터 접근 및 종류, 모델 가중치까지 지목한 대중국 봉쇄 목록이다. 환구시보는 이를 기술 봉쇄·진영화·배제로 이뤄진 '냉전 플레이북'이라 불렀다.

1940년대 핵을 지금 AI로 바꾸면 똑같다: 미·중이 참고하는 같은 플레이북

1946년 핵을 독점한 미국이 국제 관리를 명목으로 '바루크 플랜'을 내놓자, 소련은 이를 독점 유지 장치라며 거부했다. 이 구도에서 핵을 AI로, 소련을 중국으로 바꾸면 지금의 양상이 그대로 재현된다. 냉전의 기술 경쟁이 관리 제안, 동맹을 묶은 기술 봉쇄(코콤), 밀수와 보복(도시바), 봉쇄와 동시에 진행된 핫라인 구축이라는 네 국면으로 전개되었듯, 지난 열흘간의 미·중 대응 역시 이 각본을 그대로 밟고 있다.

속도 조절이 아니라 전력투구: 핫라인은 열리되 봉쇄는 남는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 중 AI 협력이 다뤄지는 등 소통을 위한 핫라인은 열리겠지만, 패권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봉쇄 기조는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백악관은 감속을 수용하지 않았고 중국은 협정에 동참하지 않았다. 바루크 플랜이 무산된 뒤 미·소 양국이 무기와 우주에 더 많은 자본을 쏟아부었듯, 감시 기구와 통보 채널이 신설되어도 AI 인프라 투자와 모델 개발은 속도 조절이 아닌 오히려 '전력투구'의 길을 걸을 것이다. 안전성을 논하는 담론과 실제 실행은 다르며, 금번 속도조절에 대한 우려로 AI 비중을 낮출 이유는 없다.

삼국의 플레이북

- 미국 : 중국 시장 봉쇄를 통한 우위 고착화. 중국 AI에 '관리되지 않은 AI' 프레임을 덧칠하는 것
- 중국 : 우주에 먼저 나갔지만 해체된 것은 정작 소련.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시장이 없었던 소련의 실패를 거울삼아 오픈 웨이트와 대중화된 시장으로 우위를 확보 노력
- 한국 : AI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반도체 붐은 유지될 것. 다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사례와 같이 우회 수출에 따른 동맹국 제재와 미국의 봉쇄 속에서 빨라지는 중국의 기술 자립이 리스크

AI 속도조절론과 금리 인상을 소화 중인 증시

나스닥은 최고치이나 신고가 기록 종목수보다 신저가 종목수가 더 많다

속도 조절과 봉쇄, 두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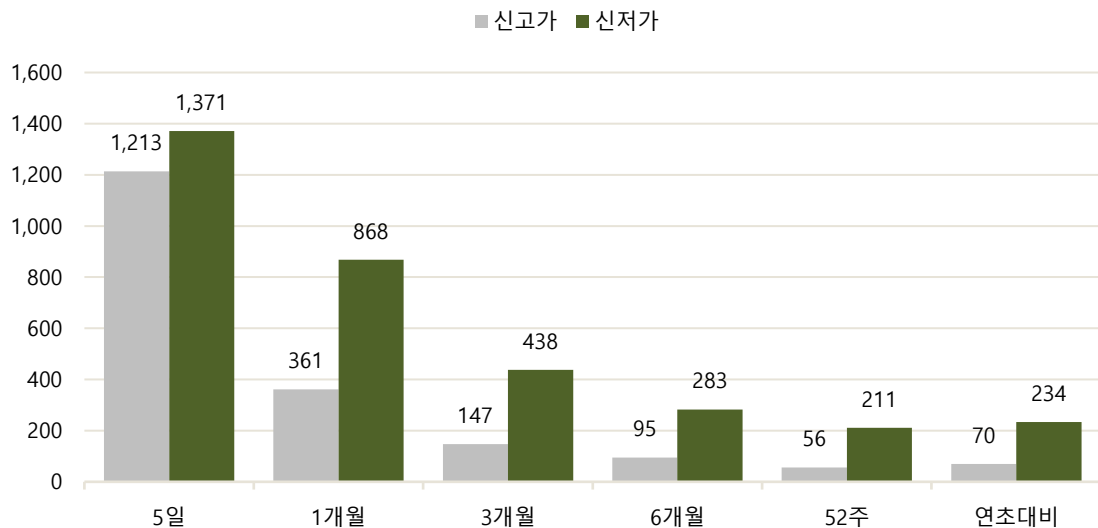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AI 속도조절론과 미국의 금리 인상 부담을 소화하며 7,000p 선에 안착을 시도 중이다. 지수만 보자면 AI 속도 조절론과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내년까지도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한 축임에는 분명하다.

필자는 지금 주요국 증시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10월말 빅테크 실적 발표와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등의 이벤트를 지나가며 상승세로 재차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나스닥은 최고치이나 신고가 기록 종목수보다 신저가 종목수가 더 많다

다만, 전체로는 미국과 한국의 이익 예상치는 상향되며 금리 인상 영향을 상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고 종목을 늘리기 보다 압축해 나가야 하는 시기로 생각한다. 투자 판단의 허들, 즉 금리가 높아졌고 5% 안팎의 미국 국채 금리가 사실상 기준선이 됐다. 시장은 확실해보이는, 즉 높아진 금리에도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투자 대상으로 점차 자금을 집중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나스닥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보다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수가 훨씬 많다. 랠리 후반부로 갈수록 자금이 확실해 보이는 소수로 모이는 현상이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온도는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지수 만큼이나 뜨겁지는 않다.

도표 1. 전체(NYSE+나스닥) 신고가/신저가 종목 수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본 자료에서는 실리콘 밸리의 정중앙에서 나온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 곱씹어보았다. 특히 1940년대 후반 이후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입장과 전략을 현재에 대입했다.

에세이 한 편이 만든 일주일

발단은 9월 12일 토요일 올라온 다리오 아모데이의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였다. 시장은 이를 AI 속도 조절론으로 읽었고 관련 주식은 급락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이 글은 외부 평가자의 랩 상주, 선도 랩 간 속도 상한 협의와 함께 아래의 대중국 조치를 담고 있다. 즉 "미국은 속도를 조절하고, 그 사이 중국은 봉쇄한다"는 두 축이며, 아모데이는 이 조치들이 "중국 진전을 늦춰 향후 3~5년간 미국 우위를 크게 벌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We Must Pace the Frontier", 2026.9.12) 중 일부

- 강력한 AI 칩이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고, 칩 밀수 작전 및 중국 외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원격 접근을 단속합니다. 칩은 중국 AI 실력의 핵심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 권위주의 국가 기업들의 무단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지식 종류)을 단속합니다. 프론티어 모델의 디스틸레이션은 후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분만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 AI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고 모델 가중치(Weight) 유출을 방지합니다.

안전 문서치고는 노골적인
견제 문구

인용한 대목을 다시 읽어 보면 이 글이 안전 담론만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중국"과 "권위주의 국가"가 실명으로 등장하고, 칩·장비·데이터센터·모델 가중치까지 차단 대상이 품목별로 적혀 있으며, 목적은 "미국 우위를 3~5년 더 벌리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안전을 위한 감속을 말하는 글이 동시에 특정 국가를 겨냥한 봉쇄 목록을 담고 있다. 시장이 급락한 첫날 읽은 것은 앞의 절반이었고, 베이징이 읽은 것은 뒤의 절반이었다.

베이징이 고른 한 단어

기술 봉쇄, 진영화, 배제

환구시보는 아모데이의 에세이를 놓고 '냉전 플레이북'을 키워드로 집어냈다. 환구시보가 말하는 냉전 플레이북은 셋으로 구성된다. 상대 진영에 핵심 기술이 못 가게 막는 기술 봉쇄,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누는 진영화, 규범을 만들면서 상대를 규범 제정자가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두는 배제다. 환구시보는 에세이가 이 셋을 다 포괄한다며 "실리콘밸리는 늦추면서 중국의 경로는 막는 비대칭 구속"이라고 요약했다.

도표 2. 환구시보 논평

Targeting China's AI: US 'tech right' unfolds Cold War playbook

By Global Times

Published: Sep 13, 2026 07:16 PM



자료: https://www.globaltimes.cn/page/202609/1370436.shtml?utm_source=gemini,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946년의 문장과
2026년의 문장

핵을 시로 바꿔 읽으면

환구시보의 비난이 과장인지 보려면 1946년의 미국을 떠올리면 된다. 당시 미국은 핵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 무기를 만든 과학자들은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고, 미국만 갖는 것도 위험하지만 남이 갖는 것은 더 위험하며, 확산되면 인류 절멸까지 갈 수 있으니 국제기구가 감시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 결론이 바루크 플랜이었다. 이 문장에서 핵을 시로, 소련을 중국으로 바꾸면 아모데이 에세이의 골격이 그대로 나온다.

핵을 시로 바꿔 읽기

[1946] 핵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독점한 상태도 불안하지만, 소련이 가지면 더 위험하다. 확산은 인류의 위험이다. 그러니 국제기구가 감시하고 개발 속도를 억제하되, 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미국은 핵을 유지한다.

[2026] AI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프런티어 랩이 독점한 상태도 부담이지만, 권위주의 국가가 가지면 더 위험하다. 확산은 인류의 위험이다. 그러니 외부 평가자가 감시하고 개발 속도를 조절하되, 그 사이 중국에는 칩과 장비와 모델이 가지 않게 한다.

두 문장의 차이는 주어 뿐이다. 앞선 쪽이 위험을 이유로 관리 체제를 제안하고, 그 체제 안에서 자기 우위를 유지하며, 뒤선 쪽의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가 같다. 뒤선 쪽이 이를 독점 유지 장치로 읽는 것도 같다. 1946년의 소련이 그랬고, 2026년의 중국이 그랬다.

AI를 놓고 냉전 플레이북
이 재현되고 있다

즉 지금 AI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은 새로운 각본이 아니라 냉전 각본의 재연에 가깝다. 다른 것은 무기가 아니라 모델이고, 우라늄이 아니라 칩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냉전에서 이 각본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순서를 짐작할 수 있다.

냉전 플레이북을 AI 플레이북으로

환구시보가 비난으로 쓴 이 말을 필자는 거꾸로 AI 플레이북으로 읽어 보려 한다. 냉전에서 같은 국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면, 결과를 바꾸지는 못해도 시나리오를 짜는 데는 활용할 수 있다. 냉전의 기술 경쟁은 네 개의 국면으로 압축된다.

독점 상태에서의 국제 관리 제안, 동맹을 묶은 기술 봉쇄, 봉쇄를 뚫은 밀수와 그에 대한 보복, 그리고 봉쇄와 나란히 간 핫라인 구축. 아래에서는 각 국면의 냉전 사례와 지난 열흘의 대응을 나란히 놓는다.

[1. 관리 제안] 1946년 바루크 플랜: 앞선 쪽이 먼저 관리를 제안한다

미국이 핵을 독점하던 1946년, 미국은 유엔에 바루크 플랜을 냈다. 원자력을 국제기구가 통제하고, 그 체제가 완성된 뒤에 미국이 핵을 포기한다는 순서였다. 소련은 거부했다. 미국이 독점을 유지한 채 남의 개발만 막는 구조라는 이유였다. 미국은 핵을 내려놓지 않았고, 소련은 1949년 자체 핵실험에 성공했다.

2026년의 대응도 같은 자리에 있다. 에세이를 낸 미국은 프런티어 모델을 늦추지 않는다. 백악관 AI 자문 데이비드 삭스는 13일 OpenAI와 엔트로픽이 이미 프런티어 복잡 구조인데 반독점 예외와 책임 면제형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규제 포획으로 보일 것이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에 필요한 유일한 가드레일은 강하고 똑똑한 대통령이라고 썼다.

중국은 1940년대 소련이 그랬듯 거부했다. 외교부 귀자쿤 대변인의 "공포 조장, 대립, 악성 경쟁"은 환구시보의 "격차를 벌린 뒤 상호 감속을 협상하자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80년 전 소련의 바루크 플랜 비판과 문장까지 닮았다.

[2. 봉쇄] 1949~1994년 코콤: 동맹을 묶은 기술 봉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는 1949년 미국 주도로 출범해 17개 서방국이 소련·동구권·중국에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수출을 공동으로 막은 체제다. 컴퓨터, 반도체, 공작 기계, 통신장비가 핵심 품목이었다. 2022년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와 2023년 미·일·네덜란드 장비 합의는 사실상 코콤을 반도체 한정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즉 이 국면은 이미 와 있고, 아모데이 에세이는 여기에 원격 접근과 증류 단속이라는 새 항목을 요구한 것이다.

다트머스대의 제니퍼 린드와 마이클 마스탄두노 교수는 코콤 45년에서 세 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첫째, 통제 목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어 오르고, 항목이 늘어날수록 집행력은 떨어져 동맹 간 균열이 발생한다. 둘째, 수출 통제는 '기어에 모래 뿌리기' 역할을 할 뿐 결의에 찬 경쟁자의 기술 확보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소련은 첩보와 공개 채널로 기술을 확보했고, 상업화에 실패한 원인은 통제가 아니라 경제 체제였다. 셋째, 동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코콤 시절보다 훨씬 어렵다. 파트너국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고, 중국은 덤시크처럼 제약 속에서 혁신하거나 클라우드 임대로 우회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훈은 지금 진행 중인 논쟁이기도 하다. 아모데이는 칩은 중국 AI 실력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 썼고, 채텀하우스의 로완 윌킨슨은 덤시크와 화웨이 Mate60의 전례를 들어 수출통제는 AI 개발 접근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지목했다. 봉쇄가 작동하느냐는 질문은 코콤 때도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

[3. 밀수와 보복] 1987년 도시바·콩스버그: 봉쇄를 뚫은 밀수와 보복

코콤의 가장 약한 고리는 집행이었고, 집행의 빈틈은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 기업에서 났다. 도시바기계는 1982~84년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함께 소련에 정밀 공작기계와 제어 소프트웨어를 코콤 규정을 어기고 수출했다. 이 기계로 짚은 프로펠러 덕에 소련 잠수함 소음이 줄어 미 해군의 탐지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다. 1987년 사건이 드러나자 미 하원의원들이 의사당 앞에서 도시바 라디오를 망치로 부셨고, 의회는 도시바 제품의 대미 수출을 제재했다. 코콤 위반 가운데 미국이 심각하게 보복한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지금의 밀수 경로는 제3국 경유, 클라우드 임대, 원격 접근이다. 칩 밀수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회색시장 역할을 한다고 지목했다. 아모데이의 밀수 단속과 원격 접근 단속은 정확히 이 구조를 겨냥한다. 냉전이 보여준 다음 단계는 제재이고, 제재는 동맹국 기업을 먼저 겨눈다.

도표 3. 1987년 도시바 사건 당시 미국 의원들의 망치 퍼포먼스



자료: Reddit,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4. 대화_핫라인] 1987년 핵위험감소센터: 봉쇄와 나란히 간 대화

냉전은 봉쇄만의 시대가 아니었다. 1963년 쿠바 위기 직후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잇는 직통선이 놓였고, 부분핵실험금지조약(1963), NPT(1968), SALT(1972)가 이어졌다. 1971년 우발적 핵전쟁 방지 협정과 1987년 미소 핵위험감소센터(NRRC) 설립 협정은 사고가 나면 서로 알린다는 통보 체계였다. 도시바 라디오가 부서진 바로 그해에 서명됐다. 어느 쪽도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고 상대가 내려놓을 거라 믿지도 않았지만, 통보 채널만은 열어 두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19~20일 허리핑 부총리에게 제안한 AI 사고 통보 체계는 구조상 NRRC의 AI판인 셈이다. 베선트는 1위와 2위 AI 강국 사이를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첨단 AI 칩과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제안된 메커니즘의 일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봉쇄를 유지한 채 통보 채널을 여는 순서 그대로다.

도표 4. AI의 냉전플레이북

냉전의 네 국면	냉전		2026	
	1 독점 상태에서의 국제 관리 제안 1946	바루크 플랜	핵 독점국 미국이 국제 관리를 제안. 소련은 "독점 유지 장치"라며 거부, 1949년 핵실험	→ 아모데이 에세이 앞선 랩이 관리 체제를 제안. 중국은 "격차를 벌린 뒤 협상 하자는 것"이라며 거부
	2 동맹을 묶은 기술 봉쇄 1949	코콤	17개 서방국이 소련·중국에 컴퓨터·반도체·공작기계 수출을 공동 차단(~1994)	→ 반도체 수출통제 2022년 미국 통제, 2023년 미·일·네덜란드 장비 합의. "코콤의 반도체 한정 부활"
	3 봉쇄를 뚫은 밀수, 그에 대한 보복 1987	도시바 사건	동맹국 기업이 소련에 정밀 공작기계를 밀수출. 미 의회, 도시바 제품 파괴·제재	→ 제3국 경유 밀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회색시장, 클라우드 임대, 원격 접근. 제재 표적은 동맹국 기업
	4 봉쇄와 나란히 간 대화(햇라인) 1987	핵위험감소센터	봉쇄를 유지한 채 "사고가 나면 서로 일린다"는 통보 체계에 서명	→ AI 사고 통보 제안 베선트(9/20) "칩·장비 수출 통제는 메커니즘에 포함 안 됨". 봉쇄와 대화는 한 벌

자료: Reddit,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냉전과 다른 것 하나

봉쇄 비용을 누가 지는가

여기까지가 같은 점이라면 다른 점은 하나다. 냉전의 소련은 서방 경제와 분리돼 있었다. 코콤이 소련에 컴퓨터를 안 팔아도 IBM의 실적에는 영향이 없었다. 봉쇄 비용은 정부 예산과 동맹 관계가 졌다. 지금의 중국은 세계 시장에 깊이 통합돼 있고, 희토류 지렛대를 갖고 있으며, 미국 반도체 기업의 큰 고객이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500억 달러로 보고 젠슨 황이 시진핑 만찬에 가는 이유다. 그래서 봉쇄 비용을 정부가 아니라 주주가 진다.

담론과 행동의 간극

속도 조절은 어떤 형태로 실행되든 반도체에 우호적일 수 없다. 학습 규모에 상한이 걸리면 컴퓨터 수요 증가율이 꺾이고, 평가·안전 케이스 절차가 붙으면 모델 출시 주기가 늘어지며, 그 사이 데이터센터 착공 판단은 뒤로 밀린다. 시장이 9월 14일에 반응한 것은 이 경로다. 그런데 그 뒤 일주일 동안 확인된 것은 담론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었다.

백악관은 감속을 받지 않았고, 중국은 협정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에세이가 요구한 조치 가운데 실제로 움직인 것은 엔트로픽의 외부 평가자 상주와 올트먼의 안전 케이스 약속, 즉 랩 내부의 운영 절차 뿐이다.

시장이 가격에 넣은 것은 무해함이 아니라 미실행

그래서 시장이 가격에 넣은 것은 속도 조절이 무해하다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이다. 반도체 주가가 반응한 변수는 안전 담론의 강도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봉쇄, 그 중에서도 컴퓨터 총 봉쇄의 강도였다. 담론이 행동으로 바뀌는 경로는 셋이다. 미국 행정부가 입장을 바꾸거나, 랩 간 속도 상한 협의가 실제 합의문이 되거나, AI 사고가 규제를 촉발하는 경우다. 셋 중 어느 것도 지금은 열려 있지 않지만, 어느 것도 닫히지 않았다. AI 가드레일과 미·중 대화의 내용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이유다.

세 개의 플레이북: 미국, 중국, 한국

미국: 기술이 아니라 시장을 봉쇄한다

봉쇄 지속, 기술은
만들더라도
팔 시장을 봉쇄한다

냉전을 그대로 대입하면 미국의 플레이북은 봉쇄의 지속이다. 다만 봉쇄의 목표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코콤은 소련의 기술 개발을 막지 못했다. 소련은 자력으로 핵을 만들었고 우주에도 먼저 나갔다. 코콤이 막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장이었다. 소련은 기술을 가졌으되 팔 곳이 없었고, 우주에 먼저 나간 나라가 먼저 해체됐다. 아모데이 에세이의 봉쇄 목록도 같은 논리다. 칩과 장비를 막아 중국이 기술을 갖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미국 모델과 경쟁하지 못하게 하고, 종류를 막아 미국 모델의 성과가 중국 모델의 시장 경쟁력으로 이전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라인은 최악을 대비하고,
기구는 주도권을 쥔다

동시에 미국은 하라인을 두어 최악의 위험은 대비하되, 기구를 만들어 규범의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다. 베선트의 통보 체계가 전자이고, 아모데이가 말한 민주국가 공조와 외부 평가자 제도가 후자다. 여기서 ‘중국 시는 관리·감독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덩시크 같은 오픈 웨이트 모델을 따돌려야 하는 미국 프런티어 랩의 관점에서 보면, 안전 기구는 경쟁 모델을 감독받지 않은 모델로 분류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소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소련의 실패는 기술 부족이
아닌 상업화 실패

중국의 플레이북은 소련이 걸었던 길을 피하는 것이다. 소련의 실패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상업화 실패였다. 소련은 핵을 만들었고 스푸트니크와 가가린을 먼저 올렸다. 기술만 놓고 보면 혼자서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소련이 증명했고,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다. 봉쇄 속에서 덩시크와 화웨이 Mate60이 나온 것도 그 연장이다. 소련에 없었던 것은 시장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기술 개발과 더불어 시장화에 집중할 것이다. 소련 때와 달리 세계화가 이미 진전돼 있어 중국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훨씬 크고, 오픈 웨이트로 모델을 풀어 채택 기반을 넓히는 전략은 그 시장 접근을 봉쇄 밖에서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중국에게 관건은 기술이 뿐만이 아니라 상업화와 시장 확보이고, 미국의 봉쇄가 겨누는 지점도 정확히 거기다.

한국: 감시 체계와 투자 속도는 별개다

한국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기구 설립이나 상호 감시·감독이 AI 인프라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모델 개발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속도 조절에 동참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중국이 늦추지 않는 한 미국도 늦출 수 없다. 기구화와 상호 감시는 속도 조절과 별개의 일이다. 바루크 플랜이 무산된 뒤 미국과 소련은 각자 무기 개발에 자원을 집중했고, 무대는 핵에서 우주로 넓어졌다. AI에서도 통보 채널과 평가 기구가 생기는 것과 별개로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되고, 경쟁 무대는 모델에서 로봇과 물리 세계로 넓어질 것이다. 한국 반도체가 미국 쪽 수요를 받는 구조는 그 사이 유지된다.

한국: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둘

다만 냉전이 남긴 리스크는 둘이다. 하나는 동맹국 저격이다. 1987년 일본 도시바가 그랬듯, 우회 수출이 드러나면 제재는 동맹국 기업을 먼저 겨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매출이 큰 장비·소재 기업도 완전한 예외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추격이다. 중국의 기술 개발은 미국의 속도 조절 여부와 관계없이 진전되고 있고, 봉쇄가 강할수록 자립은 빨라진다. 단기 실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 점검할 수밖에 없는 최대 리스크다. 지금 한국 반도체의 호황을 만드는 원인, 즉 미국의 감속 없는 투자와 중국의 자립이라는 중기 리스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도표 5. AI의 냉전플레이북

세 개의 플레이북: 미국, 중국, 한국

미국 기술이 아니라 시장을 봉쇄한다 봉쇄 지속. 기술은 만들더라도 팔 시장을 막는다 • 코롬은 소련의 기술을 못 막았다 · 소련은 자력으로 핵 개발, 우주에도 먼저 진출 · 코롬이 막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장 · 우주에 먼저 나간 나라가 먼저 해체 • 칩·장비 봉쇄와 종류 단속의 목적 · 기술을 가져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 불가 · 미국 모델 성과의 중국 이전 차단 • 하타인은 최악을 대비하고, 기구는 주도권을 쥔다 · 베스트의 통보 체계 = 하타인 · 민주국가 공조 · 외부 평가자 = 기구 · "감독받지 않은 중국 AI" 프레임, 오픈 웨이트 견제	중국 소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소련의 실패는 기술 부족이 아닌 상업화 실패 • 기술은 혼자서도 된다 · 소련: 핵 자력 개발, 스푸트니크·가가린 먼저 · 봉쇄 속 딥시크·화웨이 Mate60도 같은 연장선 • 소련에 없었던 것은 시장이었다 · 기술 개발과 더불어 시장화에 집중 · 세계화로 접근 가능 시장은 소련 때보다 확대 • 오픈 웨이트는 봉쇄 밖에서 시장을 확보하는 시도 · 모델을 풀어 채택 기반 확대 · 관건은 상업화와 시장 확보, 미국 봉쇄의 표적	한국 · 단기 감시 체계와 투자 속도는 별개다 • 중국이 속도 조절에 동참할 가능성은 거의 0 · 중국이 안 늦추면 미국도 감속 불가 · 기구화 · 상호 감시 ≠ 속도 조절 • 바루크 플랜 무산 뒤 R&D는 오히려 집중 · 무대 확장: 핵→우주, AI는 모델→로봇·물리 세계 · 한국 반도체의 미국 수요 수혜 구조 유지 한국 · 점검할 리스크 둘 • 동맹국 저격 · 1987년 도시바: 우회 수출 적발 시 동맹국 기업 제재 · 중국 공장 보유 삼성·하이닉스, 중국 매출 장비·소재 • 중국의 추격 · 미국 속도 조절과 무관한 진전, 봉쇄는 자립 가속 · 호황의 원인과 중기 리스크는 같은 뿌리
--	--	---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압축의 기준

정리하면, 아모데이의 에세이는 속도 조절론으로 읽혔지만 실제로는 '앞선 쪽은 관리를 제안하고, 뒤선 쪽은 봉쇄한다'는 냉전 플레이북의 재연에 가깝다. 바루크 플랜이 무산된 뒤 미국과 소련이 무기와 과학기술, 우주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썼듯, 감시 기구와 통보 채널이 생기는 것과 별개로 AI 투자는 줄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속도 조절 담론을 이유로 AI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다만 도입부에서 썼듯 지금은 압축의 시기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초입과 랠리의 후반부가 겹쳤고, 5% 안팎의 미국 국내 금리가 투자의 기준선이 됐다. 미국에서도 지수는 최고치인데 신저가 종목이 신고가 종목보다 훨씬 많다. 종목을 넓히기보다 좁혀야 할 때다. 압축의 기준을 이 보고서의 논리로 정하면 속도 조절 담론이 아니라 봉쇄의 방향이다. 미국 쪽 수요에 붙어 있는 HBM과 선단 공정은 봉쇄가 넓어질수록 수혜가 집중되고, 중국 매출과 중국 공장에 기대는 쪽은 봉쇄가 넓어질수록 먼저 걸린다. 같은 한국 반도체 안에서도 두 자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하타인은 놓이고, 봉쇄는 남는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 중 AI 협력이 들어가는 것은 5월에도 있었다. 이번에도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망할 일은 아니다. 정치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타인이 없는 상황이다. 우발적 충돌이 가장 큰 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냉전에서도 미국은 대화 채널을 열었지만 봉쇄는 끝까지 풀지 않았다.

결국 결국 냉전의 역사처럼 소통을 위한 핫라인은 열리겠지만,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봉쇄 기조는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규제와 대화의 공존 속에서 AI 인프라 투자와 모델 개발은 속도 조절이 아닌 오히려 '전력투구'의 길을 걸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 노이즈나 감속 담론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다만, 높아진 금리와 랠리 후반부의 시장 환경 속에서 승자는 더욱 좁혀질 것이므로, 미·중 냉전 플레이북의 수혜 반경 내로 투자 대상을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